



Occasional Paper Series

04-03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 · 美 · 日 관계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T. Patrick
Gerald Curtis

October 2004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필자 약력

Hugh T. Patrick

- 現 미국 Columbia大 교수 겸 일본경제연구소장
- Michigan大 경제학 박사 (1960)
- 아·태 경제협력, 특히 통상·금융부문의 권위자로서 일본 오히라(Ohira, 前 일본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Yale大 교수,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PAFTAD)' 공동의장을 수년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 "Pacific Basin Industries in Distress: Structural Adjustment and Trade Policy on Nine Industrialized Economies",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Japan, Korea and Taiwan"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Gerald Curtis

- 現 Columbia大 정치학과 교수 및 동아시아연구소장
- Columbia大 정치학 박사 (1969)
- 극동아시아 정책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 권위자로서 동경대 정책대학원 교수 등 역임
- "Policymaking in Japan: Defining the Role of Politicians", "New Perspectives on US-Japan Relations"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 · 美 · 日 관계

Hugh Patrick

본인은 이번 강연에서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의 장단기 성장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인 EU, 미국, 일본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불균형 및 위험요소, 특히 세계 전역의 금리,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은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과 과제 네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성장 동력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 수요는 미국, EU, 그리고 1970~80년대의 일본이라는 세 개의 성장엔진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지금 새롭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한 성장엔진 세 곳보다 수출입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난관들을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 25~50년 후에 네 번째의 주요 성장엔진이 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성장엔진들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대량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또 주요 수출상대국으로서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창출한다. 그리고 아무리 성장엔진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수입비용은 수출로써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전형이다. 미국의 경우는 분명한 예외이지만 말이다.

오늘날의 성장엔진들은 종전과 다른 속도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통적인 성장엔진 3곳의 경제가 침체 또는 수준 이하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럽대륙지역(유로존)의 경제는 독일과 이태리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금년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하며, 내년에도 잘해야 2.5% 수준일 것이다. 8%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시스템이 유로존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본인에게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유로존 역시 지나치게 긴축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인해 거시경제적 수렁에 빠진 상태이다.

* 이 글은 2004년 6월 1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녹취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미국은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적자생존(Darwinism)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끊임없는 기술혁신,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시스템, 벤처 캐피털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을 통한 활발한 기업 활동 등으로 인해 미국은 선진 산업국가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기도 하다.

미국경제는 2년 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금 강력한 경기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지금의 성장은 지속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진 노동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동생산성 증가는 고용둔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eral Reserve)에 의해 설정된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과 대규모 재정적자의 결합으로 창출된 높은 총수요이다. 이 외에도 GDP의 약 5%에 달하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경제에 항상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있는 숙련, 비숙련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역시 특이한 현상이다.

본인이 미국경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막대한 재정적자, 가격상승만큼 지대(地代)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잠재적 부동산시장 거품, 그리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테러분자 및 이라크와의 전쟁 중임에도 감세조치를 취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비용으로 부유층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혜택을 주는 미국의 조세정책도 문제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보편적인 의료보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꼭 국가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는 계층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1991년 이후 일본의 경제실적은 기대치와 잠재력을 훨씬 밑도는 실망스런 수준이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GDP와 1인당 GDP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경제역량과 일반인들의 기대치에 비해 일본경제가 매우 느리게 성장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한다. 본인의 동료인 제럴드 커티스(Gerald Curtis) 교수는 이 시기를 좀더 정확하게 '분수령의 10년' 이라고 일컫는다. 지금 일본의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은 1990년도와 크게 다르다. 현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당시와 19세기의 메이지 유신에 거의 버금갈 수도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과정에 있다. 이 전환과정이 완성되기까지는 20년 남짓 걸릴 것이다. 일본은 생활수준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성숙된 경제에 걸 맞는, 경제성장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결국 양

당이나 다수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탈냉전시대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라온 부모세대들과는 달리 편안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점차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다. 바로 이 순간 일본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에 3번째로 찾아온 현재의 호황국면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느냐, 또는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하여 장기적인 완전고용상태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GDP 성장률과 확산일로에 있는 기업전망이나 소비심리 등 경제관련 뉴스는 분명히 매우 좋다. 총수요 부족과 유희 노동력 및 설비를 감안할 때, 일본 경제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향후 수년 동안 연 3~4%씩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연후 연 1~2%의 잠재성장률로 완전고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려는 과정에 있다. 본인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만, 일본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해결해야만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 노동인구의 23%에 이르는 과다한 비정규직 근로자, 계속되는 부동산가격 하락,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도농(都農)간 경제격차 심화, 극히 취약한 금융시스템(은행, 보험사 및 일부 국영 금융기관) 등이 이러한 문제점에 속한다. 또한 공식 GDP 성장률이 약 1% 포인트 정도 과대평가 되었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는 GDP 디플레이터(deflator) 계산시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기업차원에서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1년 전 일본인들은 자국 경제에 대해 극히 비관적이었으나 금년 봄에는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 주식시장의 충격이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다소 가라앉혔는지는 모르겠으나 2004년도의 일본경제는 아주 좋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도에는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이는 경기침체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종래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성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시아의 경우,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사례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개혁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거인' 중국이다. 중국은 금융시스템,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환경문제, 북부의 수자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빠른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빠른 성장은 9%이상의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던 1970년대의 일본이나 지금의 한국처럼 7% 대의 성장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국내투자로 인한 과열이다. 중국 당국은 급격한 경제실적 저하를 가져오는 경착륙(hard-landing) 대신, 7% 정도의 성장을 이루는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률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인 문제이지만 현재 및 앞으로의 중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중국쇼크라고 하는 위험은 성장과 수입이 급격하게 둔화됨에 따라 중국의 동력이 약해져서 무역상대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운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작년엔 원유 및 여러 가지 광물들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로 중국의 수요증가 때문이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광물 및 천연자원 광산 개발노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잉공급이 갑자기 과잉수요 상태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중국의 원자재 수요도 감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의 원자재 수입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과 일본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세계경제의 두 가지 불균형성

지금 세계는 두 가지의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의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이다. 만약 달러화가 평가절하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계 여타지역으로부터 매년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달러화는 무역가중치 기준으로 2주 전에 비해 이미 약 11% 정도 하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율변동이 수출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18개월~2년간량 소요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경제의 회복·성장이 더 많은 수입 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매년 5,50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GDP의 2~3%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화의 평가절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자흐름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이다. 즉,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큰 수혜국이다), 미국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 그리고 미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은행의 대출자금 공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일본이나 중국, 한국 및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이 유입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국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구입에 사용된 자금이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유로화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통화의 평가절상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달러약세 조정에 대한 부담을 부당하게 지고 있는 이들 국가는 아시아 국가의 환율개입을 크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리상승로 인해 달러화가 일시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단기자금 유입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달러화의 지속적인 하락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동료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경제는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리라는 점이다.

두 번째의 세계적인 불균형은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것이다. 즉, 비정상적으로 낮은 명목 및 실질 금리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리수준이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을 필두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각국 및 일본의 금리가 지금 정상적 수준으로 상승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조정속도가 더디겠지만).

기대금리와 금융시장

기대금리와 금융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16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상한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GDP 성장률과 기업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제침체 이후에 특히 그러하다. 물론 향후에 대한 기대심리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대심리가 실물경제(재화 및 서비스 생산, 기업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보다는 금융경제(자산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환율, 금리변동 등)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과는 달리, 금리와 자산가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금리변동 및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 대한 전망을 더욱 더 단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자산 매니저(manager)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5~10년 후가 아니라 내일 혹은 다음 주의 자산가격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투자가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 요약한 매입 및 보유 전략이 그것인데, 이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전문가들과는 경쟁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미국 일반가계의 자산보유 행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분기별로 또는 길어야 연간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매입 및 보유 전략을 채택한다.

특히 중요한 기준금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의 국채금리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고시금리와 같은 특정국가의 단기 국채금리이다. 왜냐하면 자산보유자들은 항상 자국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금리는 본질적으로 특정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단기 신용리스크(risk)가 없는 금리이다(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이다). 특정국가 금리구조의 중심이 되는 기준금리가 금융자산의 만기 및 신용리스크 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수요공급을 통해 금리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전형이다.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국채 기준금리 및 실제금리 구조는 환율과 환율변동에 의해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금융시장은 경제행위 중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곳이며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식시장의 주가는 플러스(+)-적이던 마이너스(-)-적이던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와 지분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외국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분산효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주식을 보유하며, 헷지펀드(hedge fund) 등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순환적 변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우월한 분석능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 한국의 자산을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증가는 한국과 외국인 투자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는 단순히 기준금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다. 기준금리의 향후 변동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변화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금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난 6주 남짓 동안 보아왔던 것이다. 즉 미국 연준(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조만간, 말하자면 8월이나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인 11월이 아닌, 6월말에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변화가 그것이다. 이는 미국의 명목 및 실질 금리 양쪽 모두가 장기간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2001년도부터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현재 시장은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기대와 맞아 떨어질 경우에 한해서 바람직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조정국면에 있다.

그러므로 기대금리를 관리하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대금리

관리는 시장이 잘못된 기대를 가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발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판(Allen Greenspan)의 말 한마디는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려는 방식은 연준이 향후 1~2년에 걸쳐 단기금리는 가령 25 베이스 포인트(basis point)씩 소폭으로 점진 인상하고, 장기금리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장단기 금리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본인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리상승 추세가 통화정책의 장기 목표인 완전고용 및 저(低)인플레이션 상태의 금리형태로 복귀하기 위한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한 조정 과정이 한국처럼 최근 국내금리 변동이 없었던 국가에서는 환율과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다.

본인이 금리 전문가는 절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언급에 대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향후 1~2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2%(코어CPI 기준)에 다소 못 미칠 것이며, 연방기금 및 미국 국채 금리는 약 3% 수준,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는 대략 6%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 세계경제에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장애가 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즉, 유가 추가상승 가능성, 인플레이션 급증, 2005년도 미국, 일본,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의 예기치 못한 전쟁양상 변화, OECD 국가에 대한 테러공격 등이 그것이다.

한국경제 현황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밖에 언급할 것이 없다.

우선,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금융 및 기타 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 프로그램 및 정책을 신속하고 폭넓게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룬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하다. 생각만하고 개혁 및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큰 비용을 치른 예가 일본이다. 한국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금년까지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5.5%로 작년 3.1%의 두 배 수준이며 내년에는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경제

실적은 구조조정 및 개혁 비용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이 한국경제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만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기업투자와 소비 수요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책, 특히 노사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의 대치국면을 윈-윈(win-win)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약 15년이 걸렸다.

한국경제의 4대 장기과제

마지막으로 향후 10~20년, 나아가 50년까지의 한국경제에 대한 중요한 장기과제 4가지를 언급하겠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통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닐지라도 결국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 통일은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조정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중국에는 그에 따른 혜택도 보게 될 것이다. 이 한반도 통일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우며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두 번째 과제는 아시아 전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산업혁명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산업혁명에 일찍이 참여한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산업혁명에 전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며, 한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

향후 한국의 선진화 과정은 장기간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력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의 제조업 및 수준 높은 서비스업으로 계속 전환해야 한다. 기술은 장기적으로 훌륭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기업은 외국 기술을 도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채택하여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독자적인 기술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한국이 이러한 노동숙련도, 투자, 기술 증진의 발전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

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중국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다.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도시화나 단순히 편안한 생활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자유를 갈구하는 중산층의 확대 등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 한국이 이러한 조정과정을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낸 것은 인상적이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권위적인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정치시스템이 전환된 것과 최근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진정한 정치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오늘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과, 긴장, 불확실성이 있지만, 본인은 장기적인 한국 민주정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

한국경제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노동력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좋은 경제정책을 개발·시행함에 있어서 유연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경제학 용어로는 세계 생산곡선)에 가까워지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최고조에 달한 후 둔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결국 한국경제의 1인당 성장률은 최대 약 2%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10년 평균으로 볼 때 이보다 빠르게 성장한 선진 부국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요 과제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변화만큼이나 극적이며 양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급격한 가치변화 중 하나는 과거 자녀의 수를 중시하였던 것에서, 보다 나은 교육과 건강 그리고 부모와는 다른 직업을 택하는 쪽으로 각 가정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자녀의 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교육열은 특히 강하다.

높은 출생·사망률, 비교적 짧은 수명, 빠른 인구증가율 등의 전 근대적인 형태에서 낮은 출생·사망률, 높은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둔화 또는 감소 등으로 가는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과정은 순조롭다.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남한 인구는 2023년에 약 5,060만 명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평균출산율이 2%를 약간 상회해야 한다. 1960~1965년의 한국 출산율은 5.63%였고 인구는 2,500만 명이였다. 지금의 출산율은 1.41%

이며 인구는 4,700만 명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1.4%로 계속 간다고 가정해보면 앞으로 약 천년 내에 한국 국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 인구는 최고조에 달한 후 2050년에 약 12% 감소한 4천 4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지면 한국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만큼 부유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인구가 노령화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약 15년 이내에 노동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에 가면 노동력 부족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비용은 더 커지는 반면,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게 된다. 수치 면에서 보면 1960년도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9%였으나 2000년도에는 7.2%였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25년도에는 19.1%, 2050년도에는 34.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15세 이하 자녀의 수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도에 42.3%, 2000년도에 21.1%였으며,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10.5%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잠재노동인구(15~64세)의 비중은 1960년도에 54.8%, 2000년도에 71.7%였으나 2050년도에는 1960년도와 대략 같은 수준인 55.1%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래 노동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만일 성장이 둔화된다면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도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은 해외 인구의 대규모 한국 유입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도 본인의 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분명히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기는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인구구조의 장기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전망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과정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며, 유럽 선진국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소득 국가들 중에서는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만이 유일한 예외이다.

마지막 과제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상호 연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세계 속에서 민족 고유의 주체성과 언어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한국 내에 영주하는 소수민족은 사실상 없다. 대부분 한국인들 간의 차이점은 지역적 정체

성 및 헌신, 방언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교육환경, 노동의 이동성, TV의 역할을 통해서도 계속 없어져갈 것이다. TV 드라마나 연속극은 보편적인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동질화되어 갈 것이다.

한국(남·북한)은 구어 및 문어 양쪽 모두에서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유일한 지역이며, 잘 알려진 한국인 거주지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어는 한국의 독자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편으로 외국인을 배척하기 좋은 장벽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세계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한국의 향후 전망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낙관적이라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미국경제와 일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Gerald Curtis

오늘 본인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미국 대외정책, 특히 동아시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자 한다. 강연 중에도 언급되겠지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월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지 간에 미국 대외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하고, 대통령 선거가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우려를 갖지 않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의 케리(John Kerry) 후보가 당선되면 특히 정책 스타일이나 수사, 동맹국들과의 공조에 있어서 가치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달성하는 기본 목표와 전략 면에서 볼 때,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해야 할 자국의 안보적·경제적 이익 범위 내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갖는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사태 때문에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강연 말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일본의 대외정책 및 미·일 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아무도 그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재임 3년 동안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재선가능성을 높일 만한 수준까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부시대통령은 2000년 대선당시 직접투표에서는 패했으나 연방법원에서 5:4의 판결로 당선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부시대통령은 이라크 정책 실패로 인해 인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략 42% 수준으로, 그동안의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11월까지의 이러한 수치를 바꿀 만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 악화나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와 같은 악재만 없으면 손 놓고 있어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케리 후보가 쉽게

승리하리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선거가 이번 주에 실시된다면, 본인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리라고 본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경제가 호황이라는 점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보는 경제상황, 즉 소위 ‘주머니 사정’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고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호가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부시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공격,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 아웃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일자리가 유출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재정 및 무역 적자 확대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분명히 취약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경제호황과 일자리 창출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전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적이 국가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가진 테러조직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종의 제3차 세계대전인 것이다. 이번 전쟁은 적의 실체와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양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들은 최고사령관을 바꾸기 꺼려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심리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가 의료복지, 동성애자 결혼, 조세정책, 대외정책 등 어떠한 연설을 하다가도 결국은 주제가 항상 테러와의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의 ‘테러와의 전쟁’은 고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케리 후보는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전쟁수행 면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인 미국 국민의 인식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부시 대통령이 유리한 다른 한 가지는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케리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심어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인물이지만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만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라크 관련 핵심 이슈에서 케리는, 미국이 이라크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심어 주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케리는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을 4만 명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즉, 케리의 입장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다. 그는 보다 많은 나라의 참전 중요성과 UN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민들에게 현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러한 케리의 이라크 정책에 관심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존 케리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조짐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케리가 부통령으로 입후보 하면 지지도가 반등할지도 모른다. 특히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하여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수락하는 것과 같은 매우 극적인 일이 생긴다면 케리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분명 많이 있지만 맥케인 의원은 관심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며, 본인도 그가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200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부시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유권자들을 케리로부터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네이더의 악역은 반전감정이 계속 확대될 경우 그만큼 더 커지기 쉽다. 반전 지지자들의 표가 케리에게 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네이더가 자신의 국내 정책이나 반(反)세계화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약간 더 얻어낸다면, 케리의 당선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케리가 랄프 네이더를 대선경쟁에서 탈락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불리한 요인들도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라크 문제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1년 전에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68%였다.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하거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알 카에다(Al Qaeda)와의 연계되었다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 후에도,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대통령 결정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았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지지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잘못된 것이며 부시의 대이라크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이라크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다. 11월까지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부터 11월까지 이라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로의 주권이양은 6월 30일에 이루어진다. 후세인을 강력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라크가 붕괴되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황이 좀 더 안정되고, 부시가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이라크 문제를 처리한다는 시각을 미국 국민들이 갖게 되면, 이라크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뚜렷한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이는 현안 이슈로 떠올라 부시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캐릭터 이슈(character issue)라고 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시 행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행정부 내에 미국인의 신념과 어긋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그다드에 있는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의 포로학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진 미국 내 기본권 침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미국위협에 대한 본질성과 절박성에 관한 거짓말, 신(新)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부시 행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이 모든 것들이 많은 미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어느 후보가 신뢰성이 더 많으며 미국의 가치관을 더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이슈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지도 모른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휘발유 가격에 특히 민감하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아마 한국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휘발유 가격이 1갤런 당 2달러(한국의 경우 3.79리터 당 2,318원 또는 1리터 당 612원)를 넘게 될 경우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다가오는 여름철 동안 미국인들은 여러 곳을 여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면서 휘발유 값이 왜 이리 비싸까 하는 생각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중동정책 실패와 연관 지어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은 이를 단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실패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냉소적인 사람들은 11월이 가까워지면 투표 전에 유가를 하락시킬 물꼬를 트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나 다른 산유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워싱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선거가 이 시점에서 실시된다면 본인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부시든 케리든 어느 쪽도 낙승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대통령 선거가 2005년 1월 이후의 미국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겠는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수사학적인 면에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인은 부시 행정부가 보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나 외국에 대해 불필요하게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지 아니면 적’ 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오만하고 무례하게 비취진다. 케리 행정부가 이러한 자세의 수위를 조절하고 협력상대국과의 상호협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방향이나 수사학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반대 움직임도 강했다. 케리 행정부는 미국인의 생활 속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른 노선을 취할 것이다. 또한 예산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확대하고, 부시 행정부가 실시했던 부유층을 위한 감세의 폭을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을 재정비하는 조치가 실시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케리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부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상·하 양원과 백악관을 같은 정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를 때에는 더욱 어렵다. 설사 케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상원까지도 우세를 유지할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케리가 조세개혁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 연구한 유명한 학자가 기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을 위한 권력’이다. 대통령은 성명발표나 언론을 활용하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상의하며 타협을 한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 및 균형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것보다

부족한 수준에서 얻게 될 것이며, 설득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식은 연속성을 가진다. 가령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행정부를 거치는 정책의 연속성이 가장 인상 깊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모두가 과거의 정부와는 다르게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출범한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도 취임 초에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중국을 베이징의 학살자로 버릇없이 키웠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했지만, 2~3년도 못가서 180도로 변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떠오르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하였다.

지금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취임 초에 클린턴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앞서 말한 바와 유사하다. 그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대신 전략적 경쟁관계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3년 후,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대중국 전략을 추진하였다. 대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은 미국의 국익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이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일본과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에, 클린턴 행정부는 친(親)중국 쪽으로 너무 치우쳤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는 관심을 제대로 쏟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방향을 바꾸어 일본과의 ‘전략적 대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하였다. 본인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비중을 두겠다는 부시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만일 앨 고어(Al Gore)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일본에 대해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일(對日) 접근방식에 대한 청사진은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Armitage Report)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보고서의 이름에 있는 아미티지는 그 후 미국 국무부 차관이 되었다. 일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미티지 보고서가 제출 당시에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로 널리 회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보고서가 공화당원인 아미티지와 민주당원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주도한 초당적 위원회의 보고서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고어가 대통령이 되고 나이 교수가 지금의 아미티지 자리에 있다면 미국 대일정책의 청사진은 ‘나이 보고서(Nye Report)’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점을 말하자면, 미국은 대일관계 강화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일본의 경제적 위협이 지금은 과거사가 되었다는 것, 미·일 양국 간

에 제기되는 긴장관계, 공화당 대통령이나 민주당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일정책이 비슷하다는 것 등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정책노선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클린턴 대통령 자신도 임기 내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당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어떠한 협상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과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다.

현재의 부시 행정부 입장은 이와 다르며 고어 행정부가 취했을 법한 대북 접근방식과 점점 가깝게 변해가고 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긍정적인 혜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6자회담 중에도 한 편에서는 양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는 최종목표가 북한의 핵무장 해제가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핵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핵동결 교섭을 하여 북한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새로운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신보수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한편,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과거 미·북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로서, 북한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들 중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케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케리는 선(先) 미·북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는 최소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입장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북 양자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핵관련 물질을 수출하려 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해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력사용까지도 암시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 해제가 번복할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커다란 외부 충격이 없다면 미국 대외정책의 계속성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평상의 범위를 벗어난 외부충격이 상존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국가안보나 동맹관계, 그리고 앞으로 있을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략에 대한 미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사태의 심각성이 과장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은 반세기동안 전쟁의 위험과 취약점을 안고 살아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01년 9월 11일까지 미국인들은 미국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않았다. 처음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미국 본토에 대한 유일한 공격은 구소련과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전쟁억지력이 그러한 전쟁의 발생가능성을 막아줄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독특한 안보의식을 갖게 되었다.

9·11사태와 같은 엄청난 충격은 미국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가정 때문에 생겨났다. 본인이 볼 때는 9·11사태가 미국인의 사고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보다도 더 깊은 충격을 준 것 같다. 진주만 공격은 미국 고립주의의 배후기지를 파괴하였으며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태평양의 한 섬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었지 일반시민들이 일하고 있는 뉴욕 맨하탄의 민간건물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 지금 미국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단어는 “취약점”이며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본토방어”이다. 이 단어들에 미국 대외정책 용어사전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9·11사태는 동맹의 의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다. 2001년 9월 11일 이전에는, 가령 한국과 미국이 안보동맹을 맺는 것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이며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에 미국이 침공 받을 경우 LA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이 파병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와 유사한 불평등 관계는 미·일 동맹관계로서,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가지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9·11사태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이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돕는 관계가 동맹이란 생각이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즉 엄격하게 말하면 전쟁 중인 미국이 승리하도록 돕지 않는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Koizumi Junichiro) 일본 총리는 이러한 현실을 본능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여, 일본이 테러와의 전쟁 중인 미국의 동맹국임을 보여주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반테러 관련 입법조치를 하였으며,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카소네(Nakasone) 전 총리처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잘 단련된 정치적 본능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본능이 그로 하여금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의 신뢰성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비록 현 정부가 일부 인사들에게는 다소 반미적이며 미국 군사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노무현 대통령 역시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동맹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이라크정책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것이다.

9·11 테러사태는 미국이 동맹에 대해 갖는 의미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난제를 안겨주었다. 즉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책에 추종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에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미국을 지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노련한 미국 외교관이라면 이를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서 미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지 않고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에게조차도 정교하고 노련하다기보다는 미흡하고 당황스럽다.

9·11사태는 전쟁억지력 효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억지력은 적대국이 살아남고자 하는 국가인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른바 깡패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지도층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전쟁억지력은 그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억지력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쟁억지력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전쟁억지력이 테러리스트에게는 효과가 없는 말이다. 전쟁억지력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인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시각이다. 이는 집권당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방위전략의 완결판은

선제공격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케리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격을 계획 중인 테러집단이 모처에 있다는 정보(이라크 경우와는 달리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테러공격이 벌어질 때까지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겠는가? 나중 기회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은 테러공격이 감행되기 전에, 적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선제공격 시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현장 상황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적이 미국인을 살상하고 파괴할 기회를 포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9·11사태 이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시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9·11사태는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중이라는 점만을 확인시킨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 또한 확인시켰다. 즉, 이번 전쟁은 어떤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위협적인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 세계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주한미군 재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냉전시대의 미국 군사전략은 서독이나 한국처럼 적과 아주 가까이 위치한 최전방에 미군을 방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미군이 그곳에 주둔함으로써, 러시아가 독일로 진격하거나 북한군이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은 병력을 방어적 위치에 묶어두지 않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력의 이동 신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전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군사전략은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역량과 임무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은 미군의 이러한 세계적 병력 재배치의 일환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케리가 당선되면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포기하고 9·11사태 이전의 냉전시대에서 사용되었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러한 전략이 다소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략적 접근 방법은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 군사전략의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자국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최고위층이 바뀌면 9·11사태 이후의 자국 이익 보호방식에 대한 미

국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러한 결정을 늦춘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휴전선에서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병력을 1/3로 감축한 미국의 결정은 군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생각, 나아가 한국 국민들의 인식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세계적 미군 재배치 전략은 냉전이 종식되었으므로 인계철선은 안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한·미 안보공약이 퇴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한·미 안보공약이나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을 나타내고자함도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한국과의 적절한 협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뜻밖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점은 한국 내의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보편적 특징인 일방주의와 사전협의의 부족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일본

일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본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외정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이 반전(反戰)주의를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사항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쟁의 배경과, 일본의 대외 및 방위 정책을 지금의 형태로 억제해온 것들(헌법적, 법률적, 심리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일본인들은 더 이상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금기시 되던 것들은 사라졌으며, 지금은 개헌이 주요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제9조 등 여타 헌법조항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관한 공감대가 없으며, 또 그 공감대가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될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개헌의 본질에 관한

논의만 가까스로 시작한 상태이다. 의회 양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헌법상의 개헌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개헌에 대한 합의가 근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어려울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지도력에 대해 염려스러운 것은 대외정책에서 혼선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對)테러전쟁과 이라크 정권교체를 위한 무력사용에 대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지지 입장을 보인 상태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지지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엄청난 실수라고 보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의 이라크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루어냈다. 일본 여론은 부시 대통령 하의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미국과의 유대강화를 우선시하는 자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끼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해 일본인 모두가 미국과의 유대강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본 대외정책 방향의 전략적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일본 기업인들이 중·일 경제관계가 쌍방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형태로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면서 양국 경제관계는 급속하게 확대·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치관계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악화된 상태이다. 그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할 생각임을 매번 암시해 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결과는 빈약한 것으로 전략적 의미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의욕만 앞섰기 때문이며, 대외정책을 너무 손쉽게 국내정치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과의 이번 면담에서 이뤄진 것은, 1년 반 전에 있었던 두 사람간의 첫 번째 회담을 통해 일본으로 귀환했던 피납 일본인들의 자녀 5명을 본국으로 데려온 것이 전부다. 또 다른 피납 일본인의 미국인 남편과 자녀 둘의 일본 귀환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으며, 북한이 납북한 다른 사람들의 현황을 조사해보겠다는 애매한 약속만 받았을 뿐이다.

또한 그는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지도 못했다. 고이즈미는 나카소네 전 총리 같은 사람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위험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국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인 대외 정책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현명한 방식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크게 볼 때 일본 대외정책에는 다소 대비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일본을 태평양의 영국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그래서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보면 미·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일본이 추구하는 대외정책목표의 기본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일본의 최우선 대외정책목표이기도 하다. 다른 한 가지는 비록 일본이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일본을 발전하는 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기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역 안보체제 및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중국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일본 대외정책의 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신적인 틀에서 크게 탈피한 상태이므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화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의 대외정책 접근방식은 세계 시스템의 주요 현안을 규명하여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속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응적인 정책 접근방식이다. 즉, 일본의 대외정책목표는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 대외정책에 커다란 돌파구가 새롭게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질 의 · 응 답

[질 문] 한국의 대미관계 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질 문] 일본은 절대적 인구감소를 의미하는 두 자리 수 인구감소율 시대에 접어들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1억 2천만 인구가 1억 천만~8천만으로 감소된다는 말이다. 이는 노동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감소와도 연관된다. 50년 이상 지속된,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향후 일본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둘째, 일본은 이미 미국과 견줄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들 두 나라는 단연 돋보인다. 하지만 1인당 GDP 성장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 그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인구감소는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근본적으로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질 문] 귀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견해를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 주둔했던 미군의 역할과 향후 50년을 생각해 보면,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실현하고,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곤 하는 유럽의 한 지역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전쟁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치원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해온 미군의 존재로 인해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가시적인 적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미군이 충분히 배치될 경우, 미군이 존재하는 지역은 모두가 서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북아시아냐를 떠나서 미군배치에 변화가 생기면, 수 천년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서로 싸우는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아갈까 염려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귀하께서 언급한 바처럼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향후 50년 동안에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군사재무장의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또한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질문] 두 분 교수께 한 가지씩 질문이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질문이다. 세상에는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나 위기가 있고 또 위기관리가 존재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일 외환거래량은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는 몇 년 전에 비해 20~3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세계가 더욱더 좁아지게 되면 많은 작은 사건들에 물리적으로 대처하는 현재의 IMF와 같은 여러 가지 안정화 수단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계금융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세계 최대 규모중 하나인 이라크군을 15만의 병력으로 약 한달 만에 궤멸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래전 측면에서 미국 군사력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문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이 얼굴 없는 테러와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수행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150만의 병력도 부족할지 모른다.

이처럼 세상이 무섭게 발전하는 동안에 위기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위기관리 차원에서, 귀하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귀결되리라 보는가?

[질문]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난 후 세 가지 질문을 하겠다. 어느 분이든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가장 친미적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귀하가 정의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라크가 테러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를 미국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미국 정부가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도소 내 이라크 포로들에게 자행된 가혹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추문은 미국의 모든 긍정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을 아주 편안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라크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는 한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아마 세계 여타 지역의 친미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질문이다.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베트남 경우처럼 장기화되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미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둘째, 한국 내에는 지금의 한·미 관계 혹은 ‘동맹’ 관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워싱턴의 모든 공식입장은 ‘건설한’ 관계라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두 분은 현재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다.

셋째, 한·미 동맹관계 등의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질문] 미국 국방부의 세계방위태세평가서(global posture review)에 의하면 한국은 주요 작전기지(main operation base)로 격하될 것이며 심지어 전진작전지역(forward operation site)로 전략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 일개 대대가 감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전과 꼭 같지는 않겠지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동맹관계 회복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동맹국의 개념이 바뀌고 미국 국민의 사고도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방위선 후퇴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Hugh Patrick] 한·미 경제관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다. 본인은 양국 경제관계가 기본적으로 건설하다고 생각한다. 현안으로 나타난 긴장관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익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관심사는 보다 대등한 동반자 관계에서, 주한미군 지휘규정 등 미군 재배치 및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당면한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 상황이 근본적인 위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전환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 대한 직접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른바 한·미·중 ‘삼각’ 경제관계에서의 중국이라는 새로운 요소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는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한국경제 기반을 다양하게 만들며, 이처럼 다양화된 경제기반은 대부분 유익하게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미국은 항상 기술 혁신 및 창조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한국 및 여타 국가들의 이러한 역할도 점점 커질 것이다. 자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의 세계 금융기구들이 앞으로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게 유리하다. 이는 또 다른 자산 및 가치판단 방식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책임성에 또 다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의 전개상황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발전해 나고 있는 것이지 위기 상황은 아니다.

장기적인 일본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일본은 실제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첫 번째 선진국이다. 15~64세 사이의 절대인구수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전환과정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선진경제인 관계로 세 가지의 성장 요인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노동시간 및 노동력증가율이다. 이 노동력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노동투입량이 매년 약 0.5%정도씩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는, 노동자 1인당 실질자본이 얼마나 많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저축 및 투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노동자 1인당 자본비율이 다소 플러스(+)-적인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 속도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는 전자혁명으로 인한 혜택을 누려왔다. 이 전자혁명은 비단 IT부문뿐만 아니라 소매업 등 모든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본인은 앞으로의 기술발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부문에서 더 큰 기술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연 2%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 전혀 허황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총 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 이는 잠재성장력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일본의 연간 성장률이 1~1.5%가 될 것이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소득수준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노동자수 감소로 인해 총 GDP가 빠른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 GDP는

사실상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힘”에 지나지 않는다. 총 GDP가 한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지수로서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총 GDP보다 1인당 GDP나 구매력 지수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즉 생활수준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이 생활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일본은 부유한 나라이다. 이러한 일본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다. 한국도 점점 부유해질 것이며, 따라잡기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점이 되면 더 부유해질 것이다.

위기관리 및와 헷지펀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 주식시장은 특이한 시장으로 인식되어 저평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참가자가 많아지면 초기에는 변동성이 높아져 혼란이 커겠지만 시장은 그만큼 더 효율적이 된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제반 시스템의 조정이 이루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 양쪽 모두의 조정과정이 원활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다. 즉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갑작스런 충격으로 오지 않도록 시장이 조정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혼란에 반응하는 것은 그 요소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변동성이 큰 심각한 시기에도 세계경제에 유익하도록 금융시장이 점점 더 통합되고 효율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당연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동성은 시장이 폐쇄되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교착되어 값비싼 대가를 치를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으며, 미국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무릇 어떠한 전쟁이던지 간에 자원 측면에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즉 자원이 낭비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전쟁은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ein)이 제거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 참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은 평화에 대한 잘못된 전략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잘못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1950년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것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 때문이었다.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에 가면 친구로서 그리고 영웅으로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폭탄공격을 받았다.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편향된 가정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커티스(Curtis) 교수께서 해주시겠다.

[Gerald Curtis] 본인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미군은 향후 1년 정도만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 경우처럼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국 여론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하지만 UN에 이관함으로써, 이라크 문제에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토록 하는 대신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이라크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다.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리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으로 인해 중동지역의 '판도라의 상자' 를 연 셈이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다음번엔 어떤 문제가 튀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위협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교착되어 한없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새로운 고립주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미국이라는 자기만의 요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의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이라크 문제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 시각은 여러분들과 같다. 미군은 미국 패권주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적어도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유럽이 바로 그곳이다. 결국 NATO는 두 가지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첫 번째는 구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지역안보기구를 통해 독일을 포용함으로써,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무력을 또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이 서유럽에 재차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제 이러한 것은 더 이상 문

제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 이 서로 전쟁을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공화당의 우파인사와 민주당의 좌파인사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중요한 논지를 제공한다. 그들은 공히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만 있다면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시각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민주주의 세계 건설'을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 평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를 보호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앞서 말한 시각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신보수파'라는 공화당의 우파이다. 그들은 무력사용을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이라크 정권 붕괴의 결과에서 나타난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서 얻은 한 가지 좋은 점은 민주주의와 평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미군이 완전 철수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비중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선 미국이 앞으로 주력으로 삼을 신속기동여단의 이상적인 전진기지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세력에 대한 대응기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워싱턴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12,000명을 감축하여도 20,000명 이상의 미군이 여전히 한국에 남는다. 본인이 아는 한,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것은 군사적 의미이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의도에 의심을 갖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동맹관계를 격하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 노선을 취하기 위한 사전 포석 때문도 아니다. 서울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관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적절한 사전조율 부재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북아시아는 지역안보포럼 창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의 상호 동맹관계가 앞으로도 아시아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경제기구를 보완하는 안보관련 지역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며, 북핵관련 6자회담이 이와 같은 지역안보기구의 한 가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을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안보 대화채널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러한 대화가 '아세안(ASEAN)+10 회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의가 더욱 정례화 된다면 유익한 방향으로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상황이 변해가는 만큼 투명성과 대화를 대폭 제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강연에서 언급된 동맹국과 관련하여, 미국이 자국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워싱턴의 명령을 따른다는 국내여론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처음부터 이라크전쟁을 반대했으며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을 하는 미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일본 및 한국 정책당국자들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지 않았다면 한·미관계 그리고 미·일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한·미관계의 현 상황은 실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여론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다. 부시 행정부 내의 이른바 신보수파들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 유화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이러한 견해차이가 조정되고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전에서 동아시아 정책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라크 문제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부시든 케리든 동아시아 이슈가 크게 득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케리가 가끔 김정일 정권과의 양자회담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또 노동조합 표를 의식해서 기업들의 중국과 인도에 대한 아웃소싱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동아시아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항상 그랬다.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도 그러할 것이

며, 11월에 누가되든지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미국이 당면한 어렵고 중요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US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Patrick

I here consider the prospects for global and East Asian economic growth, both in the near term and in the longer term.

I focus on the major global growth engines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now the new engine China, and on some major global imbalances and risks, particularly the recent increases in U.S. interest rates that are influencing interest rates, stock markets, and foreign exchange rates throughout the world. I will not consider in any detail the current Korean economic situation, though obviously it is affected by what happens in the world economy. Finally, I address four Korean major long-term economic trends and issues.

Engines of Growth

Over the past half century, demand in the global economy has been pulled by three engines of growth: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particularly in the 1970s and 80s, Japan. The world now has a new engine in China, which is growing rapidly though it still is a smaller source of both exports and imports than the three traditional engines. Nonetheless, assuming China is able to successfully manage its very significant long-run domestic economic and political difficulties, it almost inevitably will be the fourth major growth engine over the next 25 to 50 years. Engines generate growth in other economies by importing large amounts from them, being a major source of the demand for their exports. Typically, even growth engines have to pay for their imports by exporting themselves, though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 notable exception.

The engines today are pulling at different speeds and with different effects. The

three traditional engines are coming out of recession or subpar growth. The continental European economies - the eurozone - are improving on average, though with Germany and Italy as laggards, but only growing 1.5 percent this year and maybe 2.5 percent at best next year. What I find shocking is that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ve created and maintained a social welfare system that tolerates as normal an unemployment rate in excess of 8 percent. However, that is their social choice as rich countries. They also seem to have put themselves into a macroeconomic straitjacket, with both fiscal and monetary policy too tight.

The United States economy is the most Darwinian, with the least adequate social safety net. At the same time, it is the most dynamic of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based on its ongo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ts world class university educational system, and its dynamic entrepreneurs funded in various ways, including venture capital.

The American economy is now in the process of strong cyclical recovery from its recession of two years ago. This recovery is unusual in several respects. First, growth has been based particularly on continued, surprisingly rapid, increases in labor productivity. This has meant that employment has lagged, though it now is picking up. A second unusual feature is the high degree of aggregate demand being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a large government budget deficit and extraordinarily low interest rates set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central bank. Two further unusual features are the persistent huge current account deficit in the U.S. balance of payments, now about 5 percent of GDP; and the continuing flow of immigrants, both of high skills and low skills, which always provides a new impetus for the American economy.

My major concerns about the American economy are the very large government budget deficit; the potential property market bubble as prices have risen while rents have not; and the still excessively high unemployment rate. The U.S. government tax policy is wrong, both in reducing taxes while we are fighting wars on terrorism and in Iraq, and in disproportionately benefiting the rich and even

well-to-do at the expense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Moreover, the U.S. government is weakening the social safety nets for poor Americans; we do not even have universal health insurance coverage. What is good for me is not good for the country. I, and of course others in my tax bracket, should be paying more taxes.

The performance of the Japanese economy since 1991 has been far below both expectations and its potential, and accordingly has been disappointing. However, in absolute terms the GDP and GDP per capita have not declined; they simply have grown much more slowly than people expected and than the economy has been capable of achieving.

Many refer to the 1990s as Japan's Lost Decade. My colleague Gerry Curtis more accurately refers to this period as the Watershed Decade. The Japanese economy, society, and political system are very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in 1990. Japan is in the process of a long run,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at may be almost as significant as that of the loss of World War II and the Meiji Restor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transformation process will take two decades or more to complete. I visualize the new Japan will be a country with an even higher standard of living, with modest growth as a mature economy, and a much more competitive, market-based economic system; and perhaps eventually a two-party political system or multi-party political system; and gradually evolving values as the young generation, brought up in families in comfortable circumstances, are quite different than their parents who grew up in the early postwar period of poverty and economic difficulty.

That, however, is about the longer run for Japan. Right now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Japanese economy is only in a very good business cycle upswing, its third in a decade, or whether it is breaking out of its economic doldrums and is onto a path of sustained recovery to its long-run full employment growth path. Certainly much of the economic news is very good: two years of sustained and increasingly rapid GDP growth, and increasingly widespread business optimism and consumer confidence. Given the lack of aggregate demand and under-utilized

labor and capacity, the Japanese economy has the potential to grow for several years at three to four percent a year until full employment is restored. Then it will move to its normal full employment potential growth rate of one to two percent a year.

Japan is almost at the point of returning to a sustained growth path. While I want to be a believer, I will not be convinced that Japan is on it until ongoing problems are more clearly being resolved. These include the mild but persistent deflation;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especially of younger Japanese; and, relatedly, the excessive number of part-time workers, some 23 percent of the labor force; continuing declines in land prices; weakened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balance sheets; the widening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more urban and rural regions; and the extraordinarily weak financial system -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ome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I worry too that the official GDP real growth rate is overestimated, perhaps one percentage point or so, due to technical problems in estimating the GDP deflator. Offsetting this, however, is the evidence at the individual company level that business is improving, in substantial part because companies have done significant restructuring and cut costs, even though more still needs to be done.

A year ago, Japanese were excessively pessimistic about their economy. This spring, they have been, in my view, excessively optimistic. The recent shock to the Japanese stock market may have cooled their enthusiasm somewhat, though it is hard to tell. I expect growth to be very good in 2004, but to slow down significantly in 2005, not a recession but probably not enough to overcome sufficiently the persistent problems I have just mentioned.

In East Asia, the most exciting and most dramatic story is that of the continued rapid growth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China, the new Asian giant. While China has a number of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including the banking system, inefficient state-owned enterprises, huge environmental problems, lack of water supply in the North, to name a few, probably the reasonable assumption is that China will continue its rapid catch-up growth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Rapid, however, is not nine percent plus growth. It probably means something like seven percent growth, gradually lessening as the economy continues to develop, as has been the case of Japan from the 1970s, and Korea today.

China's immediate problem is that the economy has been overheating due to a domestic investment splurge by businesses and by local governments.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hard to slow down the growth rate, but do so in a way that results in a soft landing of growth at, say, seven percent, rather than a hard landing of a suddenly much poorer economic performance. While this is basically a cyclical issue, it is of great importance right now and in the year ahead.

The dangers of the China shock is that its engine impact will weaken as growth and its imports slow sharply, having a strong negative effect on its trading partners. However, some other effects will be more beneficial. Raw materials prices, including oil and many minerals, have boomed dramatically in the past year, driven in substantial part by increases in Chinese demand. Previous oversupply of many minerals and natural resources meant that significant new mine developments have not taken place globally for more than a decade. Oversupply has suddenly shifted to excess demand. As the Chinese economy slows down, so too will its demand for and global speculation in raw materials, which will reduce their prices for all the countries that have to import them. That is of course particularly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Two Global Economic Imbalances

We face two important global imbalances. The first is the huge current account deficit in the United States balance of payments. The U.S. has to obtain foreign capital inflows of some \$550 billion a year from the rest of the world if the dollar is not to depreciate. The dollar has already weakened about 11 percent on a trade-weighted basis from its peak two years ago. Nonetheless,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has continued to rise, in part because it takes 18 months to 2 years for exchange rate changes to have a major impact on imports and exports, and in part because the U.S.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is generating further demand for

imports. The key questions are: will foreigners be willing to lend the U.S. \$550 billion every year; and how much further depreciation of the dollar is necessary if the U.S. wants to return to a more reasonable current account deficit of 2 to 3 percent of GDP?

Typically most foreign capital flows are private: busin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U.S. is a big recipient of FD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in U.S. stocks and bonds; and foreign bank loans to U.S.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s. But to that has been added in the past two years the huge public capital inflows to the U.S. from foreign governments, most notably Japan and China but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y purchase dollars to prevent their currencies from appreciating. This has limited the exchange rate appreciation to the euro currenc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Not surprisingly, those countries have vigorously criticized Asian government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as placing on them an undue share of the burden of adjustment to dollar weakening.

The recent rise in interest rates - to which I turn shortly - has recently temporarily strengthened the dollar as short-term capital flows have reversed course, but I think it almost inevitable that the dollar will continue to depreciat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I might note that some very good American economists, including colleagues at Columbia University, think the U.S. trade deficit is not a serious problem at all, that the U.S. economy is so attractive that as interest rates rise capital will pour into the U.S. I am more cautious, however.

The second global imbalance is cyclical, not structural: namely, the extraordinary low levels of nominal and real interest rates throughout the world, levels that can not and should not be maintained, and indeed are now beginning their upward adjustment to more normal levels, first in the U.S. and as their economies recover, in Europe and Japan - though Japan will be the real laggard.

Interest Rate Expectations and Financial Markets

Interest rate expectations and financial markets are increasingly significant. I find it curious that this year global economic growth is the best in 16 years, yet many people seem worried. It used to be that when GDP growth and corporate profits rose, especially following an economic slow-down, people tended to become optimistic and stock prices rose. Of cours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have always been important. Now it seems that expectations are focused somewhat less on the real economy -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usiness investment, employment, R & D - and more on the financial economy - stock, bond and property prices, exchange rates and movements in interest is in rates which so strongly affect the prices of these assets.

Since interest rates and asset prices change virtually instantaneously, unlike the prices for goods and services, preoccupation with interest rate movements and financial markets has imposed a more short-run view of the future. Most managers of financial assets want to know what the prices of financial assets will be tomorrow or next week, not five or ten years from now. There are of course exceptions. The buy and hold strategy, epitomized by the immense success of Warren Buffet in the U.S., probably characterizes the behavior of many American households holding assets who feel they cannot compete with the professionals in short-term financial markets. However, very few portfolio managers of stocks and bonds feel they can adopt a buy and hold strategy, especially since they are typically rewarded on the basis of their quarterly or, at longest, annual performance.

Two benchmark interest rat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he U.S. Treasury bill rate, and the equivalent short-term government interest rate in one's own country, such as the Bank of Korea-based benchmark rate, since asset holders always have some degree of bias in favor of their home country assets. The benchmark rate is a short-term credit risk-free rate - that is why it is a benchmark - which is determined essentially by the monetary policy of a country's central bank. The benchmark anchors an economy's interest rate structure, which increases by length of maturity and by the degree of credit risk of the financial asset; these rates are typically set through supply and demand in financial markets.

The US, Korean, and other country Treasury bill benchmark rates, and indeed the structure of interest rates, are linked globally by the foreign exchange rate and its movements. Financial markets are the most globalized of all economic activities, and they respond virtually instantaneously to significant changes anywhere in the world. Stock market prices in the Korea, Japan, and other Asian markets are driven in significant part by changes in foreign demand for those shares - both positive and negative. Foreign firms and institutions hold Korean securities to achieve the benefits of global portfolio diversification; hedge funds and others actively participate in cyclical swings in domestic financial markets, and try to benefit from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superior analytical capabilities. Our net balance the foreign increase in holding Korean assets benefits Korea, as well as foreign holders.

It is not simply the actual changes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s. Changes in the expectations by market participants of future changes in the benchmark rate now drive interest rates domestically and globally. That is what we have seen over the last six weeks or so: a sudden shift in expectations that the US Fed (the central bank) will first raise its short-term rate sooner rather than later - namely later in June rather than in November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r in August. This is significant because US interest rates, both nominal and real, have been extraordinarily low for such a long period; the Fed's monetary policy has actively supported the US economic recovery from the 2001 recession. In anticipation markets now have driven up interest rates throughout the world. This has a desirable smoothing effect, insofar as the expectations are correct. In fact they seem to have gone too far, and markets are now readjusting back somewhat.

Thus, management of interest rate expectations has become very important for central banks everywhere. This is typically done through policy statements designe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incorrect market expectations. What US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Alan Greenspan says or doesn't say affects financial markets everywhere. He wants to manage expectations so that as the Fed raises its short-term rate gradually over the next year or two, presumably in small steps of 25 basis points, long term rates will increase much less and the now wide

term structure will compress.

I regard the rise in interest rates in the U.S. and globally as a desirable process of returning to a more normal pattern of interest rates in a full employment, non-inflationary economy, the long-run goal of monetary policy. In some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domestic interest rates have not changed recently, the mechanisms of adjustment are exchange rate and stock market price declines.

I am by no means an expert on interest rates, so please take these projections with even more grains of salt than whatever else I have to say. Everything else being equal, I expect that over the next year or two, US inflation will rise to a little less than a 2 percent rate (measured by core CPI), that the Federal Funds and Treasury bill rate will be about 3 percent, and long-term US government bond rates will rise to about 6 percent.

However, not everything else will be equal. Unanticipated shocks inevitably occur, some good but most bad. There are important uncertainties and hence risks on the global economic horizon: the possibility of further oil price rises; the ending of disinflation and an upsurge in inflation; the likely slowdown of global economic growth due to slowdowns in 2005 in the US, Japan, and China; a Chinese hard rather than soft landing; unanticipated changes in the Iraq and Afghanistan wars or elsewhere in the Middle East; and almost inevitable terrorist attacks in one or another OECD country.

The Current Korean Economy

I want to make only a few general comments about the current Korean economy.

First, Korea is to be praised, relative to other Asian countries, for how rapidly and extensively it has carried out financial and other restructuring and reform programs and policies. However, that is only faint praise because no other Asian country has done a good job. Japan is an example of the high costs of delay, forbearance and wishful thinking. Relative to what needs to be accomplished,

Korea's reforms are only halfway there; much more needs to be done.

Fortunately, the economy is recovering well so far this year, virtually doubling last year's growth rate of 3.1 percent to about 5.5 percent, and good growth is projected for next year - 5 percent or so. Good growth reduces the costs of restructuring and reform; the danger is that it makes decision-makers complacent in dealing with the real problems that certainly exist in the Korean economy. Nonetheless, whether business investment and consumption demand strengthen are ongoing concern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 is how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Uri Party manage economic policy, especially labor-management relations. It will take major changes in the mindsets of both labor and management to turn the current confrontational mode into a win-win situation. It took Japanese labor and management some 15 years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to achieve that.

Four Major Korean Long-Term Economic Trends and Issues

Finally, I briefly address four major long-term trends and issues for Korea over the next 10, 20 even 50 year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 assume will occur eventually, though not soon, and will be essentially on South Korea terms. This will impose hug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adjustment on South Koreans, and eventually benefits as well. This topic is so important, so difficult and so complex that i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resentation.

The second major trend is the continuing rapid sprea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out Asia, in which Korea has been one of its early and ongoing leaders. Japan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participate full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Korea has been the second, together with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Korea's future industrialization process is straightforward, and long-term. Korea must continue to educate its labor force to ever higher levels of skill. Workers must continue to shift out of low productivity agriculture to high-tech manufacturing, an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services. Technology is the long-run driver of successful economy growth. Companies must always be prepared and able to import foreign technology, to learn how to use it well, adapt it, and improve on it and develop their own technology. Korea already has many success stories, both large, well known firms and smaller ones.

I am confident that Korea will continue to climb this developmental ladder of increasing skills, investment, and technology. So too will the other Asian countries, of which China is the most spectacular case. Rising incomes and standards of living, and all that they require and generate, produce tremendous transformations of societies - urbanization, a huge middle class that wants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and freedoms, not just a comfortable life. Korea has effectively and impressively made these adjustments, economically and especially politically - with two watershed events, the shift from a military-based, authoritarian government to a democratic government and political system, and the recent Uri Party victory, creating real political alternatives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policy positions. There are today many political difficulties, tensions, and uncertainties, but I am optimistic about Korea's long run political future as a democracy.

To grow well, Korea will have to continue to be flexible and effective in its ongoing reallocation of both capital and labor, an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od economic policy. There will of course be many problems, difficulties and mistakes, but I am optimistic about Korea's future economic performance.

Inevitably as an economy grows and approaches the world's best technology practices --- the global production frontier to use the economist's jargon --- Korea's growth rate will slow down once its catch-up phase is completed. Eventually the Korean economy will probably grow at a maximum of about 2

percent per person, since no rich developed country has ever grown faster than that over moving ten year average periods.

The third major trend is Korea's demographic transformation. The demographic transition is just as dramatic as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 and the two are linked. One of the most dramatic value changes in Korea and indeed throughout Asia has been the shift from the quantity of children each family wants, to the quality of their children, as embodied in the family's investment in their children's ever higher education, health, and preparation for a different occupation than that of their parents. The Korea emphasis on education is extraordinarily strong.

Korea is well along the demographic transition --- from the pre-industrial pattern of high birth and high death rates, relatively short life spans, and rapid population growth to low birth and death rates, much longer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growth slowing down or even declining. South Korea'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in about 2023 at 50.6 million,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maintain a given national population level, women must have on average a fertility rate of slightly more than two children during their lifetime. In 1960-65 Korea's fertility rate was 5.63 and Korea's population was 25 million. Now the fertility rate is 1.41, and the population is 47 million. It is assumed that Korea's fertility rate will be about 1.4 over the foreseeable future - but probably not forever, since the Korean population would then disappear in a thousand years or so. After peaking, the Korean population is predicted to decline by about 12 percent to 44 million plus in 2050. When fertility will rise is anyone's guess, but eventually Koreans will be rich enough to want to have more children, I presume.

Nonetheless,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is means not only that Korea's population is now ageing but that the number of persons of work force age will be declining absolutely within 15 years or so. Labor shortage will then be a chronic long-term problem. Society will have to pay more to support its retired population - but less to support its dwindling number of children. Some numbers: in 1960,

2.9% of the Korean population was 65 or older, in 2000 7.2%, in 2025 it is projected to be 19.1%, and in 2050 34.4%.

In contrast, children below 15 comprised 42.3% of the population in 1960, 21.1% in 2000, and will level off to 10.5% -- if current fertility rates persist - in 2050. Those aged 15-64, the potential work force, was 54.8% in 1960, 71.7% in 2000, and will be 55.1% in 2050, about the same as 1960.

This is not necessarily bad economically and socially. Despite the absolute decline in its future labor force, Korea's economy will continue to grow, if slowly, and so will the already high standard of living.

In these projections, I assume there will be no major immigration of foreigners into South Korea. More importantly, and in contradiction to my assumption of eventual reunification, I do not include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to South Korea. That will certainly slow down but not fundamentally alter these long term demographic projections. Korea is by no means alone in these demographic projections, Japan is already further along in this process, and so too are wealthy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with its substantial immigration, is the only major exception among the high income nations.

My final theme is the importance for Koreans of their Korea ethnic identity and the Korean language, in a world which will continue to become ever more interconnected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There are virtually no minorities who live permanently in Korea. The major Korean differences are regional identities, commitments, and dialects ... and they obviously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y have been diminishing over time and will continue to diminish as a result of the common educational curriculum, labor mobility, and the role of TV. TV dramas and soap operas convey a great deal about common Korean ways of life, problems, and values. Over time, Koreans will become at a national level more homogenously Korean.

Korea - both South and North - is the only major place where the Korean language is predominant and overwhelmingly so, both spoken and written, even given the notable Korean diaspora. The Korean language adds to the sense of Korean uniqueness. In one respect it is a comfortable barrier to keep out foreigners. In another respect it is a barrier making it much more difficult for Koreans to internationalize. A key Korean challenge is how to be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In conclusion, while I see many problems for Korea in the near term, I am optimistic about Korea's long-term future as an economy and as a democracy.

The US Election,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Gerald Curtis

I want to focus my comments today on what to expect in US foreign policy after the November presidential elec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East Asia. The point I wish to stress, and the one I will develop in my remarks this morning, is that US foreign policy strategy is not going to fundamentally change, no matter who gets elected in Novemb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re driving US policy and not embrace unrealistic expectations, or unrealistic apprehensions, about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US foreign policy. If the presumptive Democratic candidate, John Kerry, is elected there will be important changes, particularly in style, rhetoric and the value attached to consultation with allies. But in terms of basic goals and strategies designed to achieve them, what drives US foreign policy far more than the personality of the president is th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in which the US must pursue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That perception changed dramatically as a result of the terrorist attacks on September 11, 2001. If there is time, I will say a few words about Japan's foreign policy and US-Japan relations at the conclusion of my speech.

The US election

The honest answer to the question of who is going to win the election in November is that nobody knows. And that answer is meaningful. What it means, for one thing, is that George Bush – who lost the 2000 election in terms of the popular vote but ended up becoming president thanks to a 5-to-4 Supreme Court decision – has not in the subsequent three years increased his support to the point where one can say that his reelection chances are especially good. In the last few

months in particular, his popularity has suffered a sharp decline as a result of the Administration's disastrous Iraq policy. It is now at its lowest point ever, down to about 42%.

One should not attach too much significance to the public opinion poll numbers, however. A lot can happen between now and November to move these numbers. But what does seem certain is that the election is going to be very close. Bush is not in a position where one can say he's going to win hands down unless something terrible happens, either in terms of a worsening of the situation in Iraq or some unexpected downturn in the economy. Neither should you believe he is in such trouble that a Kerry victory is likely. If the election were held this week, my bet would be that President Bush would be re-elected.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are working in Bush's favor in this election. One is that the economy is strong. After all, so-called pocketbook issues, the state of the economy as seen by the voters, are of critical importance in leading people to decide how to vote. The US economy is enjoying strong growth and in the last few months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increase in job creation. The Democrats have had to drop the slogan "jobless recovery" in their attacks on Bush's economic policies. The Democrats are focusing their attack on the Administration's tax policies' favoritism to the wealthy, on the alleged loss of jobs through out-sourcing to countries like India and China, and on the exploding budget and trade deficits. Bush is no doubt vulnerable on these issues, especially in certain regions, but an economy that is growing and creating jobs has to be seen as very favorable for Bush's reelection prospects.

Furthermore, and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the US is a nation at war. It is not just the Bush Administration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Americans who believe that we are engaged in a global war on terror. It is a kind of third world war, but one in which the enemy is not a state but an unseen trans-national network of terrorist organizations. Fear instilled by an inability to identify and locate the enemy makes this war unlike any fought before. And it is a natural reaction when you are a country at war to be reluctant to change the commander-

in-chief, to want to support the president.

George Bush understands this psychology all too well, which is why when he gives a speech, whether it be about health care, or gay marriage, or tax policy, or foreign policy, he always returns to the theme of the war on terror. "War on terror" has become a stock phrase in the campaign. Kerry is trying hard to convince the public that he would be a more effective leader in fighting this war. However, people tend to support the incumbent president in wartime and besides,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the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that Republicans are better at fighting wars than Democrats are. So the American public's perception that we are a nation at war favors Bush's reelection prospects.

Another advantage Bush has is that his likely Democratic opponent, John Kerry, has so far failed to instill a sense of excitement and enthusiasm among the electorate. He is reasonable and balanced but he has not been able to deliver a message to attract voters to shift their support away from Bush.

On the key issue of Iraq, Kerry is not arguing that the US should abandon the effort to bring stability and democracy to that country. What he is arguing is that tactics need to change to increase the chances of that effort being successful. Far from advocating a withdrawal from Iraq, Kerry has indicated that he supports an increase in US troop strength and an increase by 40,000 in the overall numbers of soldiers in the US Army. In other words, Kerry is not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war is unwinnable and that we should get out. He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nvincing more countries to get in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his is not a position that looks to the general public as a sharply defined alternative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So even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are unhappy with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to go to war and with its subsequent policies in Iraq are not necessarily attracted to Kerry's stand on Iraq.

While support for Bush in public opinion polls is going down, there is not much evidence that positive support for John Kerry has been going up. Kerry may get a

bounce in the polls when he chooses his vice-presidential candidate, particularly if something dramatic happens, like Senator John McCain deciding to bolt the Republic Party and accepting nomination as the Democrat's vice-presidential candidat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who apparently would like to see this happen, but McCain has said repeatedly that he is not interested. I do not believe he will run.

Another factor in Bush's favor is the possibility that Ralph Nader, who is planning to run as he did in 2000, will draw away just enough voters from Kerry to enable Bush to win. Nader's spoiler role will grow more likely if anti-war sentiment continues to grow stronger, as it is likely to do. The anti-war vote is not likely to go to Kerry. If Nader adds some of that vote to the support he gets from people who share his domestic and anti-globalization policy views, he can get just enough to deny the election to Kerry. It is no wonder that Kerry has been trying to get Ralph Nader to drop out of the race.

So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strongly favor President Bush's reelection. There are other ones that work against him. First of all is Iraq. US public opinion has shifted dramatically on Iraq. A year ago, 68% of the US public thought going to war with Iraq was the right thing to do. Even after the Administration failed to turn up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or produce evidence of ties between Saddam Hussein and Al Qaeda, support for the President's decision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in Iraq remained high. The past months, however, have seen that support erode rapidly.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ublic now believes that going to war was a mistake and that Bush does not have a strategy to succeed in Iraq.

At this point it is impossible to say how the Iraq issue will play in the election. It is still a long way to November and it is impossible to foresee what will happen in Iraq between now and the election. Sovereignty is being handed over the Iraqis on June 30th.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that opposed the US decision to forcefully remove Saddam Hussein do not want to see Iraq collapse into chaos. If the situation becomes more stable and if the American public comes to the view

that Bush has a coherent plan for dealing with Iraq, then Iraq will not become the defining issue in the campaign. On the other hand, if the Iraq situation continues to deteriorate, it can become the defining issue and it can result in a rejection of George Bush by the voters in November.

Another issue that may work against George Bush is what can be called the character issue. What bothers a lot of people i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does not tell the truth and is too influenced by people whose values are not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beliefs. The prison abuses at Abu Ghraib prison in Baghdad, the violation of civil liberties at home in the name of the war on terrorism, the lies about the nature and the imminence of the threat Saddam Hussein's Iraq posed to the United States, the influence of neo-conservatives and Christian fundamentalism on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all of these things make many Americans uncomfortable and uneasy. In the end the election may be decided by the issue of which candidate is more trustworthy and more in tune with mainstream American values.

The price of oil may turn out to be a wild card in the election. Americans are peculiarly sensitive to the price of gasoline. Even now the price of gasoline is probably less than half what it is in South Korea, but for Americans, when that price goes over US\$ 2 per US gallon (KRW 2318.60 per 3.79 liters, or KRW 612 per liter), it makes people absolutely furious. Over the coming summer months Americans will be driving a lot and each time they fill their gasoline tank they will not only be reminded how expensive gasoline has become. Many people will also link it to the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s in the Middle East. So a continued rise in the oil price is likely to be viewed by many voters as a consequence of failed political policies and not seen just in terms of the economic hardships it imposes. Some cynics would argue, however, that as we approach November, George Bush will get Saudi Arabia and perhaps other oil producing countries to open the spigots wide and drive down the price of gasoline before Americans go to the polls.

I don't know how the election will come out. I personally believe we need a

change in Washington, but as I said earlier, if the election were held now, I think George Bush would win. All we can say for certain is that neither Bush nor Kerry has much chance of winning big. The election is going to be very close.

New administration, new policy?

What difference is the presidential election likely to make for post-January 2005 US policy? If the Democrats come to power, surely there will be important changes in rhetoric. I think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unnecessarily antagonistic toward our allies and foreign countries generally. Its “you’re either with us or against us” attitude comes across as arrogant and bullying. A Kerry Administration no doubt would try to change the tone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ultation with the countries whose cooperation we are seeking.

There would also be a change in rhetoric and in direction on domestic issues. George Bush wants to hav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make gay marriage illegal. There’s a strong push to try to make abortion illegal. A Kerry Administration would take a very different line on these kinds of social issues, which loom large in American life. There also would be an attempt to shift to a more responsible fiscal policy to reduce the budget deficit and an attempt to reconstitute tax policy to reduce the tax cuts for the wealthy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brought about.

Even if John Kerry wins the election in November,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n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the President does not simply get what he wants. He needs the support of Congress which is difficult enough even when both Houses of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are controlled by the same party and all the more difficult when the President is of one party and the majority of Congressmen are from the other. Even if Kerry wins, the Republicans are almost certain to win a maj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y stand a very good chance of retaining their majority in the Senate as well. What will happen? Kerry will want tax reform. What will he get? Probably very little. One should not exaggerate the powers of the American President. Things do

not happen just because the President wants them to happen. As one famous student of the US presidency has written, the power of the President is “the power to persuade.” The President uses the bully pulpit and the media and tries to persuade the public. He cajoles and makes deals with Congress to get his legislation through. The American Constitution set up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precisely to prevent power being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whoever he may be, will get less than he asks for and what he does get will depend on his powers of persuasion.

What about foreign policy? There will be less change than many people expect. National interests don't change the day after an election. There is continuity in the way in which the nation sees its interests. If you look at US policy in East Asia, what is most impressive is the continuity of policy across administrations. Every new administration comes in saying it's going to do things differently than the previous one. Bill Clinton came to office and said, “George Bush coddled the butchers of Beijing” and that he was going to be tough with the Chinese. Within two or three years, he had turned 180 degrees and by the time he left office he was talking about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Similarly, George W. Bush came into office saying that Clinton was too soft on China and that he would take a tough line. He rejected the Clinton Administration's strategic partnership rhetoric in favor of emphasizing the US's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Three years later,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rsuing essentially the same strategy toward China as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velop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is in the vital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what imparts continuity to US China policy.

On Japan, Bush came into office saying th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d tilted too far to emphasize relations with China and did not give enough attention to nurturing closer relations with our most important ally in Asia, Japan. He promised to reverse that trend and emphasize a “strategic dialogue” with Japan. I give Bush credit for following through on putting an emphasis on a closer

relationship with Japan. But if Al Gore had been elected president, chances are he too would have adopted a similar approach to Japan. The blueprint for the Bush Administration's approach to Japan was set out in something called the Armitage Report, named for the man who subsequently became undersecretary of state. What some people forget is that when the Armitage Report was issued, it was widely referred to as the Armitage-Nye Report, reflecting the fact that it was the product of a bipartisan committee led by Republican Armitage and Harvard Professor and Democrat Joseph Nye. If Gore had won and Nye had the job that Armitage now has the "Nye Report" would in all likelihood have been treated as the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Japan. The point is that the US has a vital interest in a strong relationship with Japan and now that Japan's supposed economic threat has become a matter of the past and tensions in the relationship something that have to be addressed, the Japan policies pursued by a Republican or Democratic President were bound to be similar.

On North Korea, George Bush came in to office determined to take a much more hard line policy than the Clinton Administration. Clinton's Secretary of State had visited Pyongyang and Clinton himself was contemplating making a visit in the closing months of his Administration to meet face to face with Kim Jong Il. When he was elected President, Bush not only said he had no interest in visiting Pyongyang, he made it clear that he had no intention of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until they gave up thei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North Korea being part of the axis of evil and of the need for regime change.

But that is not the posi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day. It has moved to a position that is getting close to what would have been the approach to dealing with North Korea by a Gore Administration. In the six party talks, the US is trying to signal that there are positive benefits for the North to be derived from abandoning the effort to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There are bilateral conversations on the sidelines of the six party talks and although the goal i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there seems to me a new willingness to first of all negotiate a freeze and provide

positive incentives to the North while negotiations on the nuclear issue proceed. This is very far from where the neo-cons started out.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most hawkish people in Washington, DC, on North Korea are those who were closely involved in negotiating the Agreed Framework in the first place and feel they were betrayed by the North Koreans. No one trusts the North Koreans to keep their word and a Kerry Administration is not going to be soft on North Korea. Kerry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itiating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something the Bush Administration, at least in principle, continues to reject. Bill Clinton gave a speech recently in which he said that the Bush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is wrong. He said that we should have bilateral talks and that if the North Koreans do not agree to what we want and attempt to sell nuclear materials abroad, then we should do whatever is necessary to disarm them, including implicitly the use of military force. This is not all that different from the posi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the end,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advocate a strategy that includes both incentives and sanction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quest and have exactly the same goal of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nuclear disarmament.

A new policy ...

In the absence of any major external shock, continuity in US foreign policy is what to expect. But there has been an extraordinary external shock and it has precipitated a fundamental shift in US foreign policy. It is difficult to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September 11, 2001, on the way Americans think about national security, about relations with allies, and about the strategy that the US should use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terrorist attacks in the future.

Here in South Korea, you have lived with the danger of war and with a sense of vulnerability for half a century. In postwar America, until the morning of September 11, 2001, people simply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 realistic danger that the US might be attacked. Only if there were a war with the Soviet Union was

the possibility of an attack on the US homeland earlier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possibility, and after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belief that deterrence would prevent such a war from occurring gave Americans a unique sense of security.

It is this assumption that America is safe from attack that made September 11th such a huge shock. In my view it has had a more profound impact on US thinking than even the Japanese attack on Pearl Harbor. That attack broke the back of American isolationism and brought the US into the Second World War. But it was an attack on US military facilities on an island territory in the Pacific. It was not an attack on civilians working in office buildings in Manhattan. The key word underwriting US foreign policy now is “vulnerability” and the key objective of policy is “homeland defense.” These words are new to the lexic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September 11th changed the American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n ally.

Before September 11, 2001, having a security alliance with South Korea, for example, meant the US was committed to defend South Korea in the event it were attacked, and to do what was necessary to try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But nobody expected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come help defend Los Angeles in the event that the US were attacked. Similarly, the fact that the US alliance with Japan is asymmetrical, that the US has an obligation to defend Japan but Japan has no reciprocal obligation to the United States, was not a matter of great concern before 9/11.

But after September 11, 2001, the idea that an alliance is a relationship in which countries help each other when they are in trouble has become the new American common sense. Put in the starkest terms, the US is at war and a country that does not help it win this war is no ally.

I think Japan’s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quickly and instinctively understood this reality and realized that Japan would have to do something to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that it was America’s ally in its war against terrorism. That is why he responded with anti-terrorist legislation to enable Japan

to provide rear area support to the United States for its military campaign in Afghanistan and why he decided to send units of the self defense forces to Iraq. Koizumi is not a strategic thinker in the style of former Prime Minister Nakasone, but he has well-honed political instincts and those instincts told him that Japan had to do something to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its reliability as an ally.

Much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Although this government is regarded by some as being somewhat anti-American and wanting to lessen South Korean dependence on American military power, President Roh also understood that an alliance could not be all take and no give and went ahead to authorize the dispatch of military units to Iraq despite the unpopularity among Koreans of American policy there.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by changing the American 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an ally, pose a difficult problem for America's allies, namely how to demonstrate that they support the US on issues that Americans consider to be in their vital national interest without at the same time appearing to be subservient to US policy. A skillful American diplomacy would be sensitive to this issue and seek to find ways to secure cooperation without appearing to be demanding capitulation to American demands. The Bush Administration approach, however, rather than subtle and skillful has been flat-footed and off-putting to even the closest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9/11 also undermined American assumptions about the efficacy of deterrence. Deterrence works where the opponent is a state bent on survival. It works against even so-called rogue states as long as the leadership of that state wants to survive and understands that an attack would be met with overwhelming and devastating retaliation. In that sense, as long as one is confident that the Kim Jong Il regime wants to survive and understands that if it were to use nuclear weapons the consequence would be the utter devastation of the country, then deterrence works vis-à-vis North Korea as well.

But deterrence does not work against people who are ready to die to hurt you.

Deterrence does not work against terrorists. The belief that deterrence is insufficient to deal with terrorism is not simply a Bush Administration view. It is a widespread American view. And it means that preemption is now an integral part of US defense strategy regardless of the party in power.

If John Kerry becomes president, and receives intelligence—hopefully accurate intelligence, unlike that on Iraq—that there is a terrorist group located in place X that is planning an attack against US interests, do you think that the President would wait until the attack took place before responding? There's not a chance in the world that would happen. The US would try to take out that capability before it is used, and probably even before it became undeniably "imminent." When to use preemptive action is a policy decision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facts on the ground and there is plenty of room for disagreement. But on the principle that the US should destroy an enemy before that enemy has an opportunity to bring death and destruction to Americans, I do not believe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views of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the post 9.11 world.

9.11 not only convinced Americans that our nation is engaged in war with terrorism. It also convinced people that this war will last for a long time, that it is not going to be won in some decisive battle but will threaten and challenge the US for many years to come. And that has led to new thinking about how the US should deploy military forces around the globe. Needless to say, this reconfiguring of US global military strategy impinges directly on the disposition of US forces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American military strategy was to position forces in defensive positions on the front lines of the Cold War, up close to the enemy, as we did in western Germany and in South Korea. If the Russians were to move into Germany, or if the North Koreans were to initiate hostilities against the South, American troops were right there, a tripwire that would trigger an automatic response. American global military strategy no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ving light, mobile forces not locked into defensive positions but able to move quickly to wherever they are needed. Also, reflecting the enormous advances

made in the technology of war, it is a strategy that focuses on capabilities and missions in a way that makes it conceivable to do more with less manpower. Plans to reduce the US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are part and parcel of this global repositioning of US military forces.

If John Kerry is elected in November, is the United States likely to abandon this new strategy and reaffirm the strategies it used in the Cold War and before 9.11? There is not the slightest chance of that happening. The strategy may be modified this way or that but the fundamental strategic approach that the US is pursuing today is not going to change because of a change in administrations. Foreign countries need to recognize these new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global military strategy and decide how to adjust their own policies accordingly. It would be a great mistake to postpone such decisions in the hope that a change at the top of the US government might lead to basic change in US thinking about how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in the post 9.11 world.

I believe that the US decision to reposition forces in South Korea away from the border with North Korea to south of Seoul and the Han river and to reduce their numbers by as much as a third makes sense militarily. The question is whether it makes sense politically and whether it is being implemented in a timely manner and in a way that does not raise questions in the minds of North Korean leaders and perhaps even more so in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s about US intentions.

The global repositioning of American forces strateg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ld War is over and that a tripwire is not what is needed to deal with threats to security. But the Cold War is not over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crucially important that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the repositioning of US forces in South Korea does not signal a reduction in the US 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the US is able to convince South Koreans that these adjustments in troop levels and deployments do not reflect a downgrading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or of the importance attached to alliance with South Korea or are intended to demonstrate US displeasure with the Roh government. Yet the lack of adequat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abrupt way in which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s seem to be raising precisely such concerns in Seoul. The unilateralism and failure to adequately consult that characterizes the foreign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general unfortunately also characterizes the way it seems to be dealing with South Korea.

Japan ...

With respect to Japan, I would emphasize that there is less real change going on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an a lot of people think. There is no doubt a shift in the public discourse over foreign policy away from pacifism to a more realistic approach. Old taboos have rapidly disappeared, including the taboo on talking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debate in Japan today and the constraints - constitutional, legal, political, and psychological - that continue to shape Japanese foreign and defense policy. The great majority of Japanese are no longer opposed to revising the constitution. The taboo is gone a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is now emerging as a major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That is important of course,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revise Article Nine or anything else in the constitution and little chance that a consensus will be forged anytime soon. The debate over the substance of constitutional revision has barely started and it is likely to take many years before agreement on revision is able to obtain the two-thirds support of both houses of the parliament and majority support in a public referendum that the constitution requires for constitutional changes to be made.

Prime Minister Koizumi has had a mixed record in so far as his leadership of foreign policy is concerned. He has been steadfast in his unambiguous support for

the US in its war against terrorism and its decision to use force to bring regime change to Iraq. That support has been recognized and apprec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my view the war on Iraq was a terrible mistake but I find it very hard to argue that Japanese national interests would have been better served had Koizumi not supported the US in its Iraq policy. He has apparently forged 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with President Bush. The Japanese public in general is critical of American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 Bush but nonetheless supportive of Koizumi's decision to support Bush and to give priority in Japanese foreign policy to strengthening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Japanese perceive a direct and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at makes them all the more anxious about the need for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Prime Minister Koizumi does not, however, seem to have a clear strategic sense of where he wants to drive Japanese foreign policy.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have been growing rapidly and have deepened as Japanese businessmen have come around to the view that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can be turned into a win-win game. Political relations, however, have been set back by Koizumi's decision to visit Yasukuni Shrine. He has given every indication that he intends to continue to visit Yasukuni in spite of Chinese protests.

On North Korea, I believe that the results of his visit to Pyongyang last Saturday were meager and reflected a lack of a strategic sense, too much of a willingness to do things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and a readiness to treat foreign policy too much as a tool of domestic politics. All Koizumi accomplished as a result of his meeting with Kim Jong Il was to bring back five children of abductees who had been returned to Japan as a result of Koizumi's first visit to North Korea a year and a half ago. He failed to convince the American husband of another abductee to go to Japan with their two children and he got only a vague commitment from Kim to look into what happened to other people whom the North Korean regime had abducted.

Neither did he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meet face to face with North

Korea's leader to discuss in detail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Koizumi is not a strategic thinker as, for example, former Prime Minister Nakasone was. He goes with his instincts and is not afraid to take risks. This has played well domestically so far but whether it is a wise way to conduct foreign policy is another matter entirely.

There are two rather contrasting conceptions of Japanese foreign policy vying for support. One is to conceive of Japan as a kind of Britain in the Pacific, a country that is in but not quite part of Asia and that enjoy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conceptio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s not only an essential means for Japan to pursue its foreign policy goals but is itself Japan's primary foreign policy goal. The other is to conceive as Japan as being part of an evolving Asian community albeit one with an abiding interest in sustaining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conception, a great deal of importance is attached to strengthening regional institutions, to further integrate the economies in East Asia, and most importantly to engage China in a process of building a new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economic community.

All of these developments reflect the reality that Japanese foreign policy has become separated to a significant degree from its traditional moorings, making possible new departures in policy if circumstances are perceived to require them. But change is likely to be incremental and cautious. Japan's approach to foreign policy continu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major currents in the world system and riding them. This amounts to a reactive approach to policy: Japan's foreign policy goal is not to remake the world but to cope with it. I do not think you are going to see a major new thrust in Japanese foreign policy anytime soon.

Questions & Answers

- Q** Specifically, how can Korea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 Q** Japan's demographics are entering an era of the "double negative", an absolute contraction of population; depending on what number you wish to take, 125 million people will become 110 million, or some say 85 million. That is combined with an absolute and a relative contraction of the labor force. How do you believe these fundamental and prolonged contractions, in the sense of going over a period greater than 50 years, will affect growth prospects of the Japanese economy.

Secondly, Japan already has a very high GDP per capita, alongside the US. Relative to large, developed economies, the two of them stand out. If you assume there isn't a great degree of opportunity for GDP per capita growth, especially due to a shrinking labor force, let's hold that steady. Therefore a contracting population means a fundamental contracting contribution to the world economy. I'd be interested in your opinion.

- Q** You've given us a very useful perspective in terms of the near term. But when I look out over the next fifty years and think about the US troop deployments we've lived with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fifty years, I view the role of those troops in creating a pax Americana, a peace in the world that has been unheard of, especially in a place like Europe which used to fight itself all the time. I don't think that fundamental characteristic has changed, unfortunately, because it's human nature. But the US presence there has been like a nanny in a kindergarten. It has kept peace. If there is a fundamental enough shift in US deployments, whether or not there is a visible enemy, its presence in a region that keeps everybody at peace with each other. If that changes, whether in Europe or Northeast Asia, I fear that we will return to what history has shown us for a thousand years, our propensity to fight with each other.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we see a gentle, subtle trend, though it

won't happen, as you say, for the next decade, but over the next fifty years toward a re-militarization of that country. This will provoke China to be more protective and defensive, and therefore to also up its military position. I think that is a very unhealthy development for my children, and perhaps for all of our children. I'd like to hear your perspective.

Q I'd like to ask two questions to each professor. They are related, but they are two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There is crisis and crisis management in the world, in economics and in politics. If you look at the monetary side of the world, right now, the daily transaction of foreign exchange exceeds US\$ 1 trillion per day. This is twenty to thirty times what it used to be a few years ago. If the trend continues, you can see where we're heading in the next ten or twenty years. There's no way we can develop the kind of stabilizing forces we used to have, like the IMF, when the world was much smaller. A lot of these things work on the psychological reactions to many small events. How can we continue to maintain order in the financial world?

Similarly, looking at the political side, we have tremendous military capabilities when you look at what we did with 150'000 men, knocking out one of the world's largest armies in about one month. In the sense of conventional warfare, we've developed tremendous capabilities in the hands of the US. The problem is that the world is changing now and it's becoming a faceless war on terror, which we don't know how to have. Even a million-and-a-half wouldn't be enough soldiers.

While the world is developing tremendously, the possibilities of disorder are developing even faster. How do you see, in the long term, these things panning out, in terms of dealing with crises.

Q I have one comment to make and three questions. Either of you may want to answer.

First, as one of the most pro-US Koreans, I would see little difficulty in

qualifying ourselves as one of you “allies”, according to that definition you’ve given us. But given the fact that you have found no evidence that Iraq was preparing to launch a terrorist attack, or was harboring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now realize the US administration has launched this war on falsified evidence.

Secondly, the various scandals of the prisoner abuses in that prison in Iraq, at the prisoner camp, has deprived the US of all the main soft power, because of which we were very comfortable in supporting whatever the US was going to pursue internationally.

Under the circumstances, I find it very difficult to advocate the US position, as far as Iraq is concerned. I think this is the general difficulty many of us here in Korea, or perhaps elsewhere in the world, are sharing, as one who is extremely pro-US.

First question, suppose that this Iraqi involvement of the US is prolonged in a way that has happened in the Vietnam situation. What is going to be the impact of this prolongation, or stalemate, on the US economy in the medium- or long-term perspective.

Secondly, there are various views in Korea about the current state of health of the current US-Korea relationship, or “alliance”. But all official sources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ay that they are very “sound”. But somehow, as we see in body language, that’s somehow not quite necessarily the truth. Now, you two do not represent the US administration or the government sector. What is your frank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r health, of the US-Korea relationship? Is it fundamentally sound or is it in a very precarious state?

Thirdly, depending on the scenario and the evolution of the US-Korea relationship in terms of alliance, and so on, what could be the impact of that scenario on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medium-term or long-term.

Q According to the US Defense Department's global posture review, Korea will be degraded to a main operation base, and in worse case a forward operation site. That means one battalion will be left here. Don't you think that the history repeats, but not the same way? The revival of the alliance would help Korea and the US. The concept of allies has changed. The thinking of the US people have changed. But this retreat of the action line will make a disaster or take away from our optimistic way of thinking.

Dr. Patrick Dr. Patrick There were several questions about the US-Korea economic relationship. I think it is fundamentally sound. We are seeing some tensions that are, in some ways, health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concern has been about a more equal partnership, how bases and security should be handled, in terms of how rules of conduct for US soldiers in Korea, and so forth. Those are important issues and they should be dealt with. We always have a tendency, in every country, to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problems. Fundamentally, I don't think this is a crisis situation.

In terms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clearly we're seeing a transformation, as direct exports to the US market become less and less important, and indirect exports to the US through China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Fundamentally, what is important is this new China factor in what one might call a "tr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Korea-China-US. It is rather natural, and desirable, to see trade moving more from Korea to China, more Korean investment in China. On a whole, this is healthy. It does not undermine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In some ways, it diversifies Korea's economic base, which is probably always a healthy thing.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The US will always be an innovator and generator of technology. It will be joined, increasingly, by Japan, and now Korea and other countries too. In capital flows, our financial institutions are very effective global players and I expect that will continue. The fact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Korean stock market is owned by foreign institutions, is, on the whole, healthy for Korea. It provides additional assets,

additional ways of thinking about valuations. It puts additional pressure on corporate governance and responsibility, which are long-run desirable trends for Korea. So on the economic dimension, what's evolving is evolving naturally and is not in a crisis mode.

On Japan and the long-ru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apan is, indeed, the first of the advanced economies to have its population leveling off and declining. The absolute number of people between the age of 15 and 64 started to decline in 1995. We're already beginning to see this transition.

As a mature economy, we must consider three sources of growth. What's the rate of labor force growth going to be, labor hours worked? That's going to be negative. Japanese labor input may decline by about half a percent per year from about 2010 onward.

A second factor is how much more physical capital per worker will be created.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are fairly high in Japan. I think there'll be some positive increase in capital per worker, but probably less effectively and less substantively so than in the past.

The real issue is what will be the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e world has benefited over the last two decades from the microelectronic revolution. That's raised productivity everywhere: the retail sector, not just in IT, etc. I remain quite optimistic looking ahead to technological progress. It will probably happen more in the biotechnology, genetic health areas. It seems to be not unreasonable that output per worker will increase about 2% per year.

The number of workers in relation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will go down a bit. So that would imply that the long-run growth rate of Japan would be 1%-1.5% per year, in terms of potential capability, increasing an already very high level of income.

Though total GDP will not be growing fast, because there are fewer

workers, total GDP growth is really an international relations “relative power” sort of story. We know that total GDP has not been the major indicator of one country over another country. From an economist’s perspective, we’re not interested in total GDP. We’re interested in GDP per person, preferably at purchasing power parity. We’re interested in our standard of living. That’s going to continue to rise. Japan is rich now. It’s going to be even richer. Korea will be getting rich, and will be even richer, just at a slower growth rate because the catch-up has already taken place.

As for crisis management and hedge funds, certainly as you get new entrants into financial markets, they shake things up. If no foreigners were allowed to invest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it would be a different market. But it would be a lower valued market. The more players you have, the more disruption you have initially, perhaps with higher volatility, but the more efficient markets become.

We’re seeing increasingly efficient financial markets. That does force us to adjust. But you could argue that because they’re more efficient, they smooth the adjustment process of both bad and good news. Rather than having it hit all at once, the market smoothes the adjustment process. Financial markets react to disruptive news in a shocking way, because the news is shocking. They help smooth it out. I see increasingly integrated, increasingly efficient financial markets as being beneficial to the world economy, even though there may be considerable periods of volatility. We have to accept that as an inevitable part of life. Volatility exists, also, when markets are closed, but we just don’t talk about it as much.

What would happen if the US gets stuck in a very expensive Iraq quagmire? What would happen to the domestic economy? Well, any war is costly, in terms of resources. It’s a wasteful use of resources. In that sense, it would probably be a harmful thing. Many in the US feel that getting rid of Saddam Hussein, who was a terrible dictator, was in itself good. Going to war, winning the war, was a good thing. Our problem was that we haven’t known how to

win the peace. We have had a disastrous strategy and approach about peac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is how often fundamental events take place because of a mistaken assumption. The North Koreans attacked South Korea in 1950 because they didn't think the US would respond. The US going into Iraq thought American soldiers would be welcomed as friends and heroes. That didn't happen. Bombs were thrown. The fundamental assumptions that can dictate policy can be disastrous. That has been the problems with the US administration. How it gets out of it, I will let Gerry tell us.

Dr. Curtis Dr. Curtis I may be wrong, but I do not believe that the US military is going to be in Iraq a year from now. I don't think the US public would support policies that leave us in a kind of quagmire, such as we had in Vietnam. I don't know how we get out. Ideally, it would involve turning over responsibilities to the UN and involving other countries more while the US presence is reduced. The idea we're going to be in Iraq ten years from now is unrealistic. I cannot imagine that the American people would support such a policy. We've opened Pandora's Box in the Middle East with this war in Iraq. Since it's a Pandora's Box,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pop out next. But the worse it gets, the more the pressure will grow for the US to get out.

The danger then is not that we get drawn into an Iraq quagmire and stay there indefinitely. The greater danger is that we retreat from Iraq having failed to bring stability and democracy there. That could well generate a new isolationist mood in the United States and a retreat into a kind of fortress America.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get out of Iraq without creating pressures for the US to withdraw from playing the important leadership role in world affairs that only it can play.

About the role of US troops, I share your basic view. It contributes to a *pax Americana*. But there are two things to be said. One is that at least in one part of the world, the danger of war really does not realistically exist any more. That is in Western Europe. After all, NATO was founded with two purposes.

One was to defend Western Europe against the Soviets. The second was to embrace Germany in a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 and thereby prevent its re-emergence as the dominant power in Western Europe that might again use military power to pursue national objectives. That's no longer an issue. No one worries about a war between France and Germany.

This leads to a very important point about something that is very popular with the right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left wing of the Democratic Party. They both believe that if you can spread democracy, you will eliminate the dangers of war. This has been traditionally the Democratic view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t goes back to Woodrow Wilson's decision to have the US enter the First World War to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the idea being that the spread of peaceful democratic states would keep the world safe.

The right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the so-called "neo-cons", put an additional spin on this. They believe you can spread democracy through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One consequence of the Iraq debacle has been to show how dangerous and unrealistic this thinking is. One good thing that has come out of the Bush Administration's Iraq adventure has been to discredit the view that you can use military force to spread democracy and therefore spread peace.

In Northeast Asia, we do not face the danger that the US is going to withdraw militarily. Something else is happening in Northeast Asia, which is very important. We are increasingly emphasizing the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and putting less emphasis on the military role of the US in South Korea. I think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For one, Japan is an ideal base for the kind of forward deployed, light mobile forces that the US is going to emphasize in the coming years. Secondly, it is a base for countering long term Chinese power.

The question is how the region will react as the 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Japan in its global strategy, and as Japan develops its own ballistic missile defenses and military capabilities. If China perceives these developments as having the objective of containing a so-called China threat, then it is surely to react in a way that will spark an arms race in East Asia. So it is crucial to engage the Chinese in dialogue and confidence building activities.

As far as Korea is concerned, I am not aware that there is serious consideration being given in Washington to the full withdrawal of forces from Korea. A reduction of the US presence by 12,000 still leaves more than 20,000 US forces in Korea. From everything I have been able to learn, moving forces south of Seoul and the Han River makes military sense. The question is whether repositioning is being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convey the wrong signal to the North Korea regime about the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South. Another question is whether it being done in a manner that does not raise questions among South Koreans about US intentions. I do not believe it is being undertaken as part of a downgrading of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or because of unhappiness with the Roh government or to give the US a freer hand to take a harder line policy toward the North, yet one hears speculation along all of these lines in Seoul. This goes back to the Bush Administration's penchant for unilateralism and failure to adequately consult.

Finally, in Northeast Asia, it seems to me that it is important now to move forward more aggressively with the creation of a regional security forum. America's bilateral alliances will continue to be critically important in East Asia but there is a need for a kind of bilateralism plus in the form of regional institutions concerned with security matters to complement the regional institutions that already exist on the economic side. The six party talks on North Korea may provide the model for the kind of institution building that is needed. In addition, it is in American interests in my view for countries in the region - China, Japan, and Korea - to develop a security dialogue that does not necessarily involve the United States directly. There is such a

dialogue on the sidelines of the ASEAN plus ten meetings, but a more formal annual summit among the leaders of these countries would be a useful innovation. The point is to find ways to encourage greater transparency and dialogue as the East Asian and world situation evolves.

Concerning allies, as I said in my speech,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demonstrate support for the US on issues that Americans consider vital to their national interest without at the same time simply appearing to their own publics to be taking orders from Washington. Personally, I was opposed to the Iraq war from the onset, as I am opposed to it now. Yet I think Japanese and Korean policymakers made the right choice supporting the US in a war which should not have been undertaken. Doing otherwise would have seriously threatened the US-Japan and US-Korean relationship.

On the current US-South Korea relationship, my view is that it actually quite good. The public is not critical of South Korea. The so-called neo-cons in the Bush Administration are unhapp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unshine policy and soft-line on North Korea but these differences are being managed. There's some tension, but again, the Korean troops in Iraq are appreciated.

In any case there is not much talk right now about policy toward East Asia because there are no votes in making East Asian policy an issue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There are votes in Iraq and in how the US deals with Israel and Palestine and the Middle East in general. But neither Bush nor Kerry see much advantage in talking much about East Asia and so neither is doing so. Kerry does refer occasionally to the need to initiate bilateral talks with the Kim Jong Il regime and he also is making something of the issue of outsourcing to China and India as a way to appeal to the labor union vote. Otherwise, East Asia does not exist as an issue in this election. That's nothing new. That's almost always the case in US presidential election years. It won't be until after November that the newly elected president, whoever he is, starts to think hard about the important and difficult issues the US faces in East Asia.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